

## 35.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년 12월 3일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기획조정실장)
- 회부일자 : 2021년 12월 9일
- 상정일자 : 제28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1년 12월 17일), 원안 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의회 조직의 역량강화, 주요 시설물 개소에 따른 운영인력 보강, 소방 대응력 강화를 위한 현장인력 증원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조항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제21조,

제24조, 제27조, 제31조, 제35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48조, 제51조, 제54조, 제57조, 제60조, 제63조, 제66조, 제69조, 제72조, 제75조, 제78조, 제81조, 제84조, 제87조, 제90조, 제93조)

- 정원 조정 : 총 정원 6,387명 → 6,468명<증 81명> (안 제95조, 안 별표 5)
  - 직종·직급별 : (일반직) 증 26명<4급 1명, 5급이하 25명>, (별정직) 감 2명<5급상당 △1명, 7급상당 △1명>, (소방직) 증 57명<소방령 이하 증 57명>
  - 정원관리기관별 : (본청) 증 17명, (직속기관) 증 45명, (사업소) 증 6명, (의회사무처) 증 13명
- 소방직공무원 소방경 비율 7% 이내를 9% 이내로 하고, 소방교 비율 30% 이내를 28% 이내로 함.(안 별표 4 제3호)
- 별정직공무원 4급 상당 이상 40% 이내를 45% 이내로 하고, 6·7급 상당 20% 이상을 15% 이상으로 함.(안 별표 4 제4호)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

###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신록휴)

#### ○ 이 개정조례안은

- ▶ 「지방자치법(시행'22.1.13.)」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입법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인력 보강, 「중대재해처벌법<sup>15)</sup>(시행

15)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호 생략)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동 공공기관의 장

‘22.1.27.)」 시행에 따른 산업 안전·보건 전담 조직 신설 등 개별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고, 주요 시설물 개소에 따른 운영인력 확보, 소방서 화재조사팀 신설 등 시정 현안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여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 조직개편 내역을 살펴보면,

### ▣ 총괄

#### ① 기구

－ (본청) +1팀 / (의회) +1담당관 2팀 / (직속기관) +4팀<소방서> / (사업소) +1팀

구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기관
개편 전	16국(2실, 11국, 3본부) 90과(7관, 10담당관, 68과, 3단, 1실, 1센터)	1처 3담당관 7전문위원 5팀	2원 1센터 8소방서	19사업소	1국2과5팀
개편 후	16국(2실, 11국, 3본부) 90과(7관, 10담당관, 68과, 3단, 1실, 1센터)	1처 4담당관 7전문위원 7팀	2원 1센터 8소방서	19사업소	1국2과5팀
증 감	+1팀	+1담당관 2팀	+4팀	+1팀	-

#### ② 정원 : 순증 81명(보강 91명, 감축·재배치 △10명)

##### ▶ 관리기관별

(단위 : 명)							
구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기관	경자청
개편전	6,387	2,036	92	2,731	1,498	22	8
개편후	6,468	2,053	105	2,776	1,504	22	8
증 감	81	17	13	45	6	-	-

##### ▶ 직종·직급별

- － 일반직 26명(4급 1, 5급 4, 6급 이하 21), － 별정직 △2명(5급 △1, 7급 △1)
- － 소방직 57명(소방령 2, 소방경 12, 소방위 10, 소방장 이하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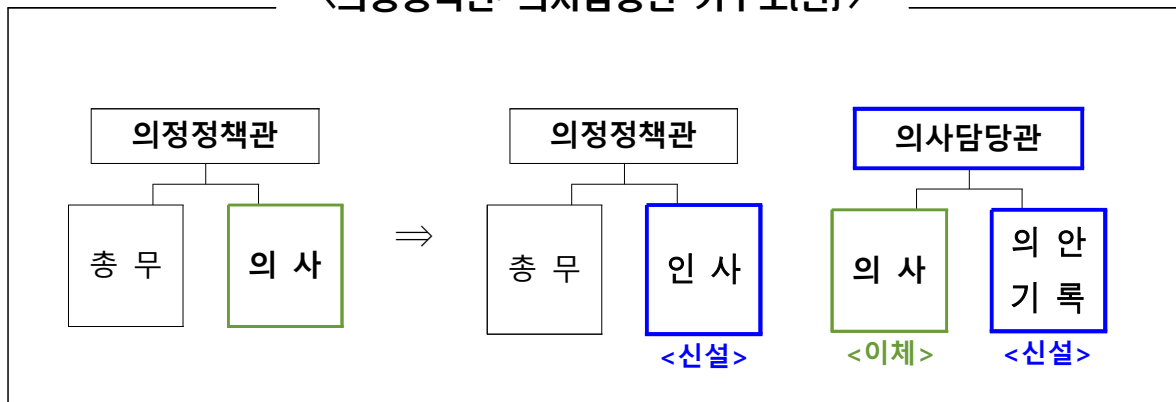
## ■ 세부내역

### ① 의회사무처 입법역량 강화 등

- (기 구) 1담당관 2팀 신설, (정 원) 증 13명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주민조례발안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담당관', '의안기록팀'을 신설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 등의 권한을 의장이 행사함에 따라 이를 전담할 '인사팀'을 신설하였음.

〈의정정책관·의사담당관 기구도(안)〉



- ▶ 또한, 「지방자치법(시행 '22.1.13.)」 제41조에 따라 지방 의회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정책지원 인력을 보강하였음.

• **(개정안)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 ① 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정책지원관이라고 한다
-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 ③ 지방의회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 ④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및 직무 제한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 ⑤ 정책지원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제102조에 따른 사무처 등에 둔다.
- ⑥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적용한다.

## ②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관련 법률상 의무이행

-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을 위해 일자리노동정책과에 '노동안전팀'을 신설하고 [ +1팀, 중 3명 ],
- ▶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전담 인력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에 전담인력을 충원하였음. [ 중 2명 ]

## ③ 화재조사법('약칭) 시행 대응 및 소방 현장인력 충원

- ▶ 정부 국정과제인 부족한 소방인력 충원계획에 따른 현장인력 보강, 화재조사법 시행('22. 6.)에 따른 화재조사 전담부서 설치, 재난현장 지휘권 강화를 위한 1급 소방서인 중부소방서 현장 지휘단장 3교대 실시 등 재난현장의 신속대응체계 구축 및

소방서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장 인력을 충원하려는 것임. [+4팀, 중 57명]

- 관서별 정원 조정내역 ⇒ 본부(+10), 소방서(+47)

총 계 (명)	본 부			소 방 서			
	시민안전 테마파크	119종합상황실	119특수구조단	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	현장지휘단
57	2	4	4	24	12	3	8

-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

⇒ 령(+2), 경(+12), 위(+10), 장(+9), 교(+10), 사(+14)

구 분	계 급 별							
	계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정원 (변경 전)	2,785	15	63	183	256	357	626	1,285
조 정	57		+2	+12	+10	+9	+10	+14
정원 (변경 후)	2,842	15	65	195	266	366	636	1,299

#### ④ 주요시설물 개소에 따른 운영인력 보강 및 현안수요 반영

- ▶ 일자리노동정책과에 노사평화의 전당 개관(11월)에 따른 시설 운영 인력을 보강하고,[중2명]
- ▶ 상수도사업본부 죽곡정수사업소에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생태유량시설\*을 운영할 '생태유량팀'을 신설하여 기능 유지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음.[+1팀, 중4명]

##### \*생태유량시설(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

- 낙동강 표류수(12.8만톤/일)를 정수처리 후 생태유량 공급(신천, 대명천, 성당못)
- 신천 수질개선과 유량 확보를 통한 생태 복원 및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

- ▶ 또한, 건축주택과에 청년주거안정 패키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실무인력을 보강하였고,[중1명]
- ▶ 문화예술정책과는 경상감영 및 달성토성의 원도심 역사문화유산

복원계획에 따라 부족한 실무인력을 증원하였음.[총 1명]

## 5 기타

### ▶ 의정정책관(직렬조정)

일반직·별정직 복수직렬로 책정되어 있던 비서업무 정원을 일반직 단수직렬로 변경하고,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의정정책관	행정·별정 5급	행정 5급	비서업무
	행정·별정 7급	행정 7급	

###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별정직) 의정정책관 비서업무 정원 직렬조정(일반·별정→일반)에 따라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변경하였으며,

구 분		합계	4급상당이상	5급상당	6·7급상당
변경전	책정기준	-	40%이내	40%이내	20%이상
	정 원	21	8	8	5
변경후	책정기준	-	45%이내	40%이내	15%이상
	정 원	19	8	7	4
증 감	책정기준	-	5%	-	△5%
	정 원	-	-	△1	△1

▶ (소방직) 소방서 하부단위 표준조직 구성을 위한 정원 확보와 타 광역시 소방직 정원책정 기준과의 균형성 등 고려한 소방직 직급체계를 조정·반영하였음.

구 분	소방정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현행책정기준	1%이내	3%이내	7%이내	10%이내	16%이내	30%이내	33%이상
조정(안)	1%이내	3%이내	9%이내	10%이내	16%이내	28%이내	33%이상
증 감	-	-	2%	-	-	△2%	-

## ○ 정원 조정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를 살펴보면,

- ▶ 이번 81명 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2022년 기준 29억 9,700만원 정도로 추계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2022년 기준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신규 수요에 대처하였음.

## ○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 현장 소방 인력 확충, 시정 현안 수요의 발빠른 대응을 위한 정원 및 기구를 재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적시성과 합목적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다만 향후 의회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처의 기구 신설, 기능 분화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 등을 잘 살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기구·운영이 되어야 할 것임.

한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맞물려 '17년부터 추진되어온 부족한 소방 현장 인력 충원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정부의 당초 재정분담 합의안을 보면 '21년부터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책정하고, 할당된 소방안전교부세 20%의 초과분(25%)으로 소방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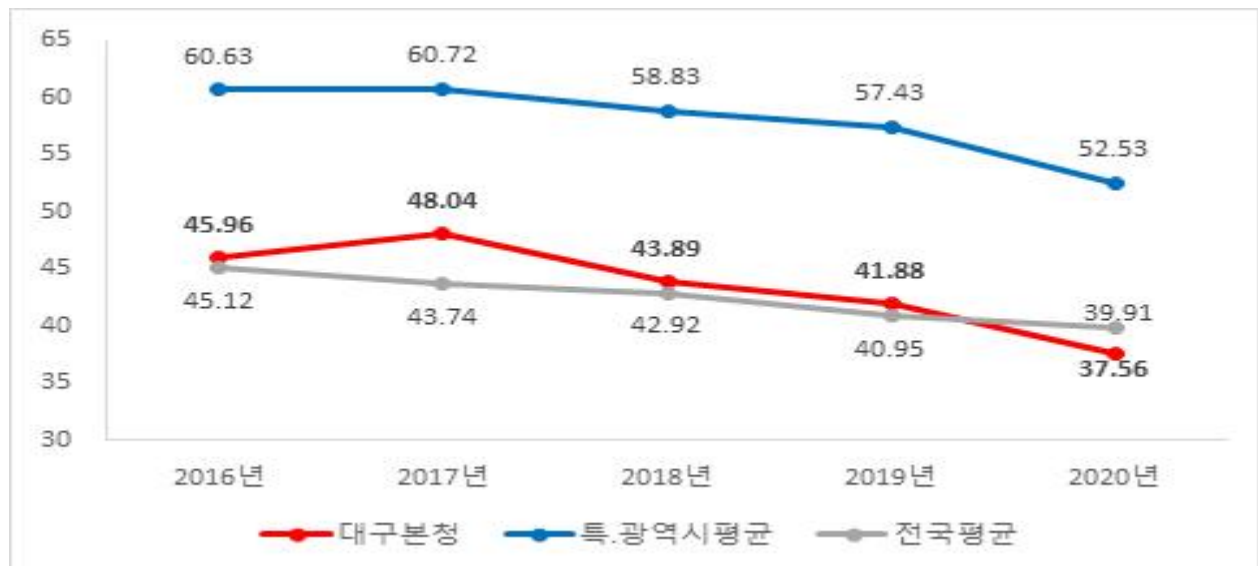
하지만, 2022년 정부의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21년 9,039억원 대비 4.3% 감소한 8,648억원으로 편성되었는바, '22년 인건비 지급



대상인원이 더 늘어남에도 정부의 지원액은 도리어 감소하는 현상이 불가피해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대구시는 2020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정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정부의 안정적 재원 지원 방안은 물론, 더 나아가 국가가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타 시도와 연대·협력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 변동 현황(결산기준)>



\* 출처 : 지방재정365, 특.광역시평균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재정자립도=(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일반회계세입규모(지방교육세 제외)\*100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건축주택과 청년주거안정패키지 사업을 위해 인원이 보장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 일정소득이하의 청년에 대해 월세지원, 전세이자에 대해 보조해주는 사업임.
○ 본사업 내용인 월세 20만원 지원에 대해 자조적인 청년의 목소리가 있으며, 가난을 직접 증명해야한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부담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음. 정부와 차별되는 시 자체의 청년 정책을 강화해 주기 바람.	○ 네. 유념하도록 하겠음.
○ 복지와 관련하여, 민원이 많은데 의회에 복지를 담당하는 팀이나 조직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 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 정책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팀 단위의 인원이 보장될 예정임.
○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 소방인력이 57명이 늘어나는데 부족한 현장 인력을 보충하고 현장기능을 원활히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 네, 연차별 계획에 따라 현장 부족 인력 총 486명에 대한 마지막 충원이 이번 조직개편으로 완성될 예정으로,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의 소방력 유지에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수정안 요지

○ 없 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